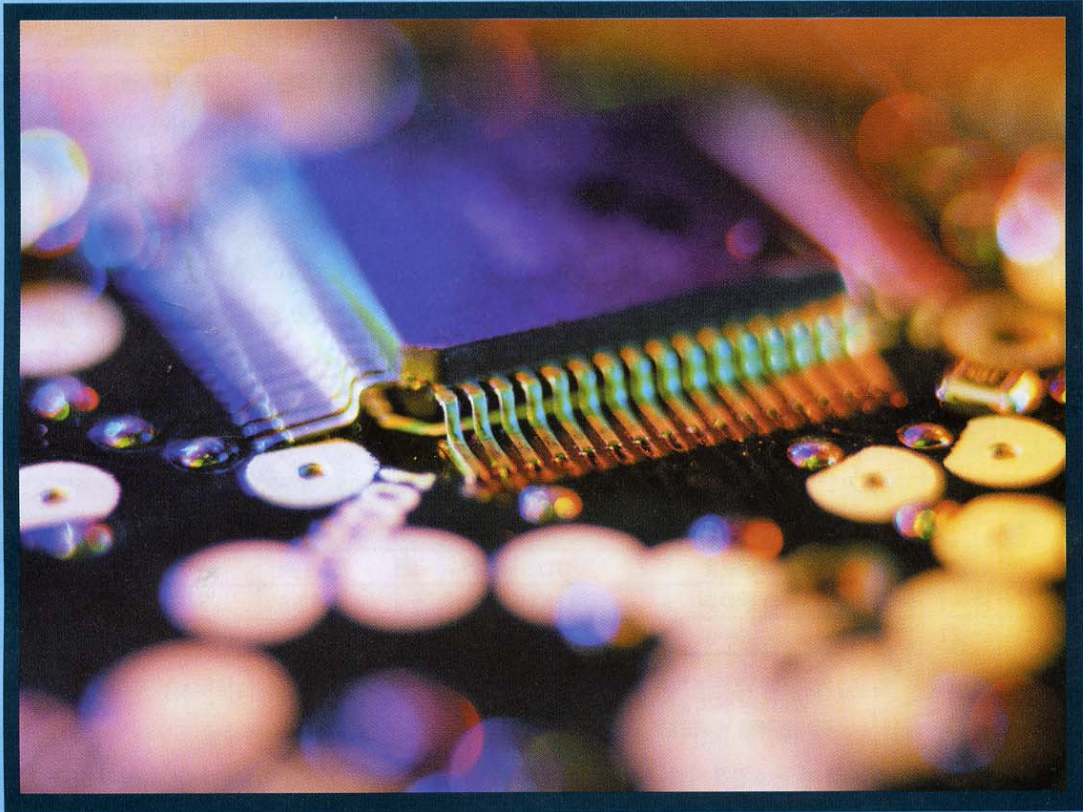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8월 / 제14권 제8호 (통권 148호)



2003. 8

CONTENTS

- 2 • 산학칼럼 / 지역금융의 현실과 대응 5 • 특별기고 / 인구노령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학대의 실태와 전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9 • 경영 · 기술정보 / 산업판도를 바꿀 10대 미래 기술 12 • 제159차 웰레세미나 / U대회와 지역발전
 15 • 특별세미나 / Harmoniz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Trade Laws 21 • 대덕단상 / 대구 화재는 풍수로 진압하자
 23 • 연구원소식 24 • 회원동정 26 • 신착도서목록 27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社 團 法 人 産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지역금융의 현실과 대응

김주현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실장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어음부도율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금융기관 여수신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금융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금융의 취약성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 경제가 지닌 지역적 취약성도 이 지역 금융위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의 금융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2년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1,754개로 1997년의 2,263개에 비해 509개가 감소하여 그 감소율이 전국 평균 19.7%보다 높은 22.5%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전국 점포수에 대한 비중도 1997년의 13.0%에서 12.6%로 낮아졌는데 비은행기관보다 예금은행 점포수의 전국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단위: 개)

	1997 ¹⁾	2002 ¹⁾	증감율 ²⁾
예금은행	713(9.5%)	565(8.9%)	-20.8%(-16.1%)
비은행기관	1,550(15.8%)	1,189(15.6%)	-23.3%(-22.6%)
계	2,263(13.0%)	1,754(12.6%)	-22.5%(-19.7%)

주: 1) ()내는 전국의 점포수 대비 비중

2) ()내는 전국의 점포수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대구·경북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총여수신 잔액은 2003년 5월말 현재 여신 50조 1,058 억원, 수신 68조 3,662억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6% 및 7.0%에 불과한 데 이는 1997년과 비교할 때 여수신 비중이 각각 1.7%P 및 1.4%P 낮아진 수치이다.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단위: 개)

	1997		2003. 5월	
	여신	수신	여신	수신
예금은행	18,703.0(9.3%)	15,459.5(7.8%)	36,197.5(7.1%)	35,519.1(6.7%)
비은행기관	22,976.1(9.2%)	38,195.9(8.7%)	13,908.3(9.3%)	32,847.0(7.4%)
계	41,679.1(9.3%)	53,655.4(8.4%)	50,105.8(7.6%)	68,366.2(7.0%)

주: ()내는 전국의 여수신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예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행 예대출은 1997년에는 비수도권 평균 99.2%보다 높은 112.1%였으나 2003년 5월말에는 비수도권 평균

106.2%보다 크게 낮은 9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비은행기관의 예대율은 2003년 5월말에는 42.3%로 1997년의 55.4%에 비해 13.1%P나 낮아졌는데, 이는 비수도권지역 비은행기관의 평균예대율이 1997년 46.0%에서 2003년 5월에는 48.1%로 다소 증가한 점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지역 비은행기관의 역내 여신이 수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한 것을 나타낸다.

예대율 추이

(단위 : %)

	1997		2003. 5월	
	대구·경북	비수도권 평균	대구·경북	비수도권 평균
예금은행	112.1	99.2	99.9	106.2
비은행기관	55.4	46.0	42.3	48.1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지역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어음부도율은 금년 상반기중 0.8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방 평균 어음부도율 0.48%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0.73%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론 대구·경북지역의 어음부도율이 금년 상반기중 급격히 높아진 것은 기 부도처리된 대구고속화물의 교환어음 미결제 등 이례적인 현상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2000~2002년중에도 지방평균에 비해 0.03~0.07%P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지역 주력산업의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기업규모가 영세한 점, 기업간 하청관계가 긴밀하여 연쇄부도에 취약한 점 등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대구경북	0.61	0.73	0.29	0.53	0.46	0.34	0.83
지방평균	0.86	0.86	0.34	0.46	0.39	0.31	0.48
전국	0.52	0.52	0.43	0.39	0.38	0.11	0.18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이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의 금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금융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섬유, 기계 등 전통적인 영세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경제구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또한 지역금융의 위축을 초래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규모의 영세성 및 낙후된 서비스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은행, 지방중금사, 지방생보사 등 지방에 본사 또는 영업 기반을 둔 금융기관들이 주로 퇴출합병되거나 살아남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점포수를 크게 줄이는 등 지방금융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기관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취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 자금조달과 차입금리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우량기업과 불량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영세중소기업은 고금리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금융원리에 부합되어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셋째,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금융의 증권화, 겸업화, 전자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자금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금융의 위축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대

형우량은행으로의 자금이탈현상이 증대되어 지역금융의 기반이 잠식되고 있다.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실물경제의 회복이 관건이므로 지역금융기관 스스로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산업은 산업특성상 다른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지역산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자극하고 지역내 금융수요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과 이를 통하여 협소한 지역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형화하기 어려운 지역금융기관 특성상 틈새시장에 대한 영업체제를 강화하여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는 등의 경영전략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소매금융, 중소기업에의 특화 또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일반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지역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고객들로부터 공신력을 의심받기 쉬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예금인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물론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신심사기능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선진금융기법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조급한 나머지 금융기관 인력이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로 조직 및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여 금융기관 자신의 생존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한 경험에서 축적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강점과 대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 기

업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금융 문제의 저변에는 지역경제의 부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도 이제는 이익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실물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기업 스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경영혁신,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면 실물경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지역금융도 부진을 털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금융은 지역사회에 대한 유동성 창출창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지역금융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중소기업, 가계 등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특히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금융기관이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좇아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 속에서 지역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연결고리인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지방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하겠다.

또한 신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앙이 지역발전을 이끌기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동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지방을 우선 육성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정부의 이러한 구상에 맞추어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인구노령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학대의 실태와 전망

: 대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박세정 | 성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노인들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학대, 방치, 착취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노인학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연구는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인학대 문제를 비교적 능동적으로 접근해 온 미국사회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이룩한 성과로는 첫째, 노인학대를 찾아내어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기록하는 작업을 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노인학대의 주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고 정신적 고통이 많은 여성노인들이란 점을 밝혀낸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아들과 딸이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일본, 홍콩 및 인도 등 다른 문화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발견하여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노인학대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정

책은 아직 도입되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 나라의 노인학대 현상은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 3.2%에서 2000년 현재 7.1%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는 치매노인의 숫자를 급속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은 사회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약 82만명(3.2%)에서 2000년 현재 약 320만명(7.1%)으로 지난 40년 간에 걸쳐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인구증가가 정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경에는 약 740만명(1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경제기획원, 1997). 이러한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는 사회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약 40년에 걸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한 급격한 변동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 가운데 일반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것으로 노인들에 대한 신체 및 언어적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노인학대 현상을

인구노령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학대의 실태와 전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 자신이 배우자 혹은 성인이 된 자녀 또는 친척이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 언어적 혹은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치는 노인들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제공, 건강유지, 동반자 역할과 같은 것이 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들 수 있다. 노인학대는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 세대간의 가치차이, 노인인구의 증가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우리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관심부족으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학대의 발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 역시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학대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인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 자신이 배우자 혹은 성인이 된 자녀 또는 친척이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 언어적 혹은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치는 노인들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제공, 건강유지, 동반자 역할과 같은 것이 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적 착취는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

는 재산이나 돈이 본인의 의지와 상반되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의 한 형태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년 정도 되었으며 노인학대는 의존의 정도, 경제상태 및 문화변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으며 고립되어 있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노인학대 유형을 설화 속에서 찾아본다면 고려시대에는 병들고 나이든 부모를 소외된 장소에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결과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전통이 최근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가지는 지위와 권위를 소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유교사상은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를 모든 도덕의 기본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하여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존경하며 돌보고 노인들에게 복종하는 의무를 지니게 한다. 부모들을 불모지 않는 자식들은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사회로부터

매장 당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한국문화에 따르면 노인들을 존경하고 돌보아야 하며 특히 혈연에 의한 책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인들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노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 또는 의무감마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도기에 속하는 노인들은 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막연히 그네들이 그들의 부모들을 부양했던 바와 같이 노후생활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기대해 왔으나 상당수 젊은 세대들의 부모부양은 노인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역시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그 결과 소외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는 노인학대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문화의 특성상 가족의 치부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상담사례를 통한 노인학대 실태

1. 언어 및 신체적 학대

가해자는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50대의 아들로서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80대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이다. 평상시에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부양자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함께 아버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례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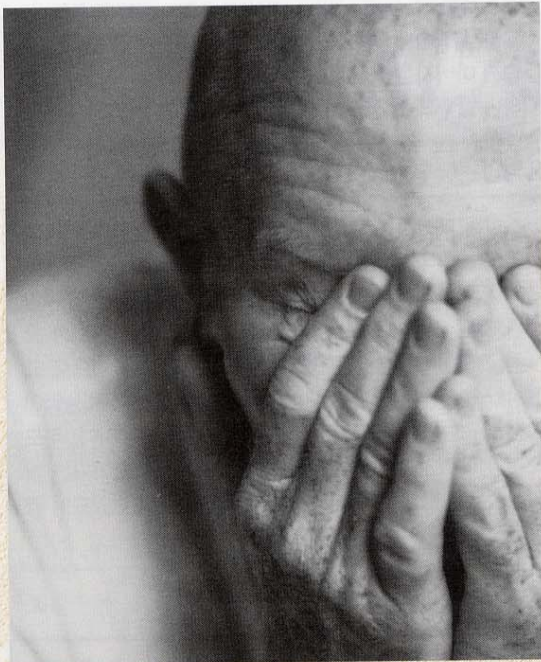
피해 대상자는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여러 명의 자식 가운데 장남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단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로한 모친을 자신이 모셔야 하는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부양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할머니가 혼자서 생활하게 된 사례이다.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장남은 50대 후반이며 할머니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경제적 착취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경제적 착취의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자식들이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피해 당사자로부터 재산 및 돈을 모두 가져갔다. 그후 자식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로 한국사회의 상당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방은 햇볕도 들지 않는 구석방을 사용하게 하고 식사도 제때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에 와서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노인학대는 크게 언어적·육체적 학대, 방임 및 경제적 착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가지 형태의 학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학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의 실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인학대 현상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원인을 밝혀내는

인구노령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노인학대의 실태와 전망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의 사회 및 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즉 노인인에 대한 편견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노인들이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고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노인은 무능하며 어린이와 같으며 성가시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면 노인들의 자존심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나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부양 부담이 가족에게 더 많이 부여될수록 노인학대의 발생율은 배가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즉 아무리 호의적인 가족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노인을 장기간 돌봐야 하는 부양자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인학대에 이르게 될 소지가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오랫동안 부양하는 부양자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과거 환자가 건강하고 활동이 왕성하던 때 현재의 부양자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홀대했던 점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며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특히 배우자들 사이에 많이 생겨나며 우리 사회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편에게 겪었던 한이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겪었던 시집살이나 홀대를 보복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노인학대 현상에 대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만을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공공기관과 전문 봉사자들은 노인학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학대 문제를 밝혀내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노인학대를 찾아내고 이를 완화 내지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마련하여 정부조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교단체 및 비정부단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활동과 노인학대 사례들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

산업판도를 바꿀 10대 미래 기술



정인상 | 경북대학교 금융공학과 교수

※ 편집자 주 :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CEO Information」 제 403호(2003. 6. 4, 집필자 임영모, 김종현)에서 요약한 것이다. 전문을 보시려면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eri.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IT 산업(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나, 이마저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저가 범용시장에서는 중국에 맹렬히 추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기술을 선정하여 2~3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과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50개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혁신도의 크기를 평가한 와해성 정도, 기여도, 니즈의 절박성 및 실현 가능성(10년 이내)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대 미래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므로, 그 10대 기술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소개한다.

〈표 1〉은 국내외 기관이 예측하는 차세대 50대 유망기술이며, 이 표 중에서 진하게 표시된 것이 10대 유망 기술이다.

〈표 1〉 국내외 기관이 예측하는 차세대 50대 유망 기술 및 10대 미래기술(고딕 표시)

대 분류	중 분류	유 망 기 술
IT	스마트 홈	홈네트워크, 디지털그린가전, 헬스케어
	디지털가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TV, 디지털셋톱박스, 스마트카드, 서비스로봇, 전자종이
	POST-PC	텔레메틱스, PDA, Wearable Computer
	소프트웨어	Agent S/W, 음성인식 S/W
	네트워크	Ad-hoc N/W, 양자암호
	전자의료기기	실버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모바일헬스기기
	미메모리 반도체	인텔리젠트 SoC, 무선네트워크용 칩, e-Car용 칩, 텔레메틱스용 칩
	전자 부품소재	LED, 유기 EL, LCD, 2차전지, 센서, 탄소나노튜브, 전자소재
바이오	BIT 융합기술	바이오 칩, Bio-IT, 인공지능기
	바이오	면역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맞춤의학, 바이오신소재, 약물전달시스템, 프로테오믹스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Eco 소재 부품, 환경복원피료제, 태양광, 연료전지
항공우주	항공우주	다목적헬기, 차세대전투기, 소형여객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자료 : MRI, SRI, NRI,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SERI의 예측자료들을 정리

- 1) **SoC(System on a Chip)** : CPU, 메모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등이 수행하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LSI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와 각종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소형화, 신뢰성 향상, 소비전력의 절감 등을 통하여 기기의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를 이용하여 개별 부품을 소형화하고 복잡화하여, 이를 반도체와 결합시키는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의 구조 개편이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인텔은 CPU, 플래시메모리, DSP가 통합된 'Manitoba' 라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프로세서를 올해 3/4분기에 출시 예정인 바, 이는 기존 제품에 비해 비용은 30% 낮고, 소비전력은 1/8이 된다고 한다.
- 2) **탄소나노튜브** :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판으로 연결되어 직경 1 - 50nm(:10억분의 1 m)의 긴 막대 모양으로 된 물질로서 미래의 반도체, 센서 등에 핵심 소재로 사용될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기존 소재보다 열, 전기 및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며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센서, 복합재료, 나노 캡슐 등으로 응용되어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의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제조원가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나 kg당 평균 가격이 1만달러(00년)에서 4,500달러(02년)에서 1,300달러(04년)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이 소재를 이용한 32인치급 FED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02년 발표하였으며 NEC는 이를 전극으로 사용한 휴대용 연료전지를 2004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 3) **전자종이** : 종이처럼 얇고 휴대할 수 있으며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로서 대용량, 동화상 표시가 가능하여 지금까지 수천년간 정보의 기록·전달을 맡아온 종이의 용도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미국의 일부 백화점에서는 가격 표시나 세일 정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고 벤처기업인 'E-ink'가 올해 말까지 상용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일본의 소니, 캐논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 4) **서비스 로봇** : 공장에서 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움직이면서 지능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봇이다. 앞으로 가사용, 엔터테인먼트용, 업무지원용, 의료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니의 애완용 로봇인 'AIBO'가 성공한 이후 혼다, 산요, 미쓰비시, 후지쓰 등 진출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 산업은 향후 PC와 자동차에 필적할 만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 5) **에이전트 S/W** :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자율성, 사회성, 반응성, 능동성 등 특성을 보유하여 의미를 해석하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학습, 인터페이스, 데스크탑,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으로 분류될 것이며 아직은 단순 응용, 비교하는 소프트웨어 수준이다. 예를 들면 검색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업체간 가격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나 음란 정보 차단 프로그램 등이다.
- 6) **Ad-hoc 네트워크** : 지금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송수신을 담당하는 단말기들이 다른 단말기의 신호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분산형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말한다. 확장성이 강하

고 재난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초기 네트워크 투자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으나 주소 문제나 보안 문제 등이 걸림돌로 되어 있다. 당초 군사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였으나 향후 센서 네트워크로 확대될 것이며 현재 10m 이내의 기기간에 운용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양과 같다. 기존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

7) 양자 암호 : 빛의 양자역학적 성질의 하나인 편광을 이용하여 특정 방향으로 편광된 빛을 광섬유를 통해 암호 데이터 별로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해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암호 기술이다. 198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최근 상용화 제품이 일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및 양자 암호로 구성되는 '양자 정보통신기술' 구현의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현재의 광통신을 대체할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양자통신 기술은 미국, 일본 EU등에서 이미 개발에 착수하였다.

8) 연료 전지 :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키는 즉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고효율 무공해 발전기로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주는 무공해 에너지원이다. 원료는 무한정인면서, 연소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으며, 전기와 함께 발생하는 열은 주택의 난방이나 급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높다. 모바일이나 가전 등에 사용되는 소용량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 되었으며 자동차 등 중대형은 상용 제품이 출시 되었다. GM, 포드, 도요타 등에서 연료전지 자동차가 개발되었고 미국, 일본 기업 등은 연료전지 개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형 연료 전지 연구에 착수하였다. 2010년 까지는 연료전지가 발전, 산업, 주거 및 자동차 등에서 주요 전력원의 하나로 자리 매김될 전망이다.

9)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 인체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해명하여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핵심 물질로 각종 질병의 원인 동시에 현재 시판 중인 약물의 95%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단백질 정보와 특정 질병의 단백질 정보를 활용하여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낸다면 이에 대응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신약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2001년 인간프로테오믹스기구(Human Proteome Organization, HUPO)가 결성되어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도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관련 IT 및 정밀 기계 등 연관 산업도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다.

10) 인공 장기 : 생체의 장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소재 및 기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원하는 시기에 인체의 장기와 교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말한다. 지금은 피부, 혈관, 관절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장기들은 이미 대체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심장, 간, 폐와 같은 복잡한 장기들은 아직 완전 이식이 불가능하다. 현재 개발되는 방법에는 전기기계를 장치로 대체하거나 동물 장기 이식, 줄기 세포 배양, 생체조직 배양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 장기가 개발됨으로써 인간의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공장기가 계속 개발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



U대회와 지역발전



박상하 |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편집자 주 : 2003년 7월 25일(금)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개최된 본원 「제159차 월레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SEMINAR

■ 유니버시아드 대회

-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대학(University)과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로 “세계대학생들의 체육대회”라는 뜻의 현재 유일한 전세계 아마추어 대회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세계 스포츠 경기로서 하계대회와 동계대회로 구분하여 2년마다(홀수년도) 개최
- '59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97년 무주·전주에서 동계U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대구하계U대회는 22번째 대회

■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게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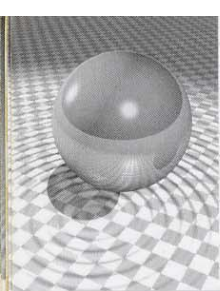
- 대구·경북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질 필요성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국제대회의 유치 필요성 고조
- 지난 '96년 정상적인 유치활동 시작, '97년 IMF 위기로 인한 유치활동이 위기를 맞이하였고 2000년 4월에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실무진의 협력비미로 인한 유치신청서 제출에도 어려움을 맞이함
-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금출연을 통한 기념재단 설립 등 이후 많은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2000년 7월 14일에 유치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세계 역사상 최단기로 유치에 성공

■ 대구 U대회의 특징

- 대회기간 : 2003. 8. 21 ~ 8. 31(11일 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참 가 국 : 171개국으로 예상(최대국가 참여)
- 참가인원 : 11,000여 명으로 예상(임원·선수·보도진 포함 : 최대 참여인원)
- 2014년까지 국제대회는 U대회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전국민의 관심 고조
- 대회주제 : Dream for Unity(하나가 되는 꿈) :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동북아의 유서 깊은 교육·문화 도시이자 앞서가는 섬유·패션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자연의 섭리와 첨단문명의 조화로움 속에서 모든 경제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려는 인류의 염원을 담은 녹색 문화체전

■ 북한의 참가가 대구 U대회에 미치는 효과

- 2000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체육위원회의 인사들과 접촉, 2002년 장웅 IOC 위원이 공개적으로 참가선언, 2003년 초 일본 아시안동계대회에서 확정
- 냉전지역으로서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전환과 북한 핵문제에 의한 긴장상황 완화의 계기



SEMINAR

제 159 차 월례세미나

- 미국의 참여선수가 줄어 들었으나 북한의 참가로 대구 하계U대회의 파급효과는 극대화

■ 대구 U대회 개최 이후의 파급 효과

- 대구의 국제위상 제고 : 2001년 JCI(국제청년회의소) A· 태지역대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국제섬유박람회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국제대회를 통해 대구시가 국제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 지역기업 및 지역제품이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 : 지역 공동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역상품의 수출 증대 (올림픽을 전후로한 86년-89년 사이의 대구 수출증가율 21%)
- 국제대회를 제대로 치뤘던 선진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자원봉사활동 등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구시민이 하나되어 국제 스포츠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뤘냄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
-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스포츠마케팅산업 활성화 : 지역대학과 세계 각국 대학간의 학술· 문화· 예술 교류 확대, 대구와 세계 주요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대는 물론 TV중계권, 스폰서, 휘장· 마스코트 등 스포츠마케팅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
- 경제적 파급효과(대구경북개발연구원(2003), 2003년 대구하계U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고용유발효과(명)	소득유발효과(백만원)
계	738,180	33,530	242,220
U대회 투자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579,180	17,760	205,050
U대회 관광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159,000	15,770	37,170

- 대구 U대회 이후 스포츠시설 활용을 위해 세계육상대회, 청소년축구대회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려고 함
- 지하철 참사로 인한 지역민의 자신감 상실을 자긍심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

■ 성공적인 U대회를 치른 개최도시 및 국가의 발전 사례

- 과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제고
- 동경 올림픽대회를 통해 전쟁 패전국가에서 비약적인 발전
- 후쿠오카 U대회 이후 체육시설들을 지역의 위락시설로 활용· 국제도시로 전환·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

■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 위한 시도민의 각오 🍀



특·별·세·미·나

Harmoniz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Trade Laws



Henry. D. Gabriel | 미국 Loyola대학교 교수



편집자 주: 본 내용은 2003년 7월 14일(월) 대구 미 문화원 아트홀에서 개최된 특별세미나 발표내용 전문의 일부분
입니다. 전문을 원하는 분께서는 연구원으로 통보 바랍니다.

Emerging Law of Electronic Commerce: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Law

A. Recent Work by UNCITRAL

UNCITRAL has completed two prior projects on e-commerc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¹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² Moreover, other Working Groups in UNCITRAL, for example the Working Groups on Transport Law and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re also looking into the incorporation of electronic commerce into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current focus on e-commerce at UNCITRAL, which is based in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³ is focused on the drafting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will govern international contracts that are created electronically.⁴ Although the United States is active in this working group, it is unclear what influence current American law will have, if any, on the final product.

B. American Domestic Law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summer of 1999,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promulgated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 The Act was intended to be adopted quickly by the vari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is has been the case. As of July 2003, forty-two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states have adopted UETA, and it has been introduced in the legislatures of

1. Unlike many UNICTRAL Model Laws that are designed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use,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as designed as a model for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Legislation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adopted in Australia, Bermuda, Colombia, Franc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Ireland,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ingapore, Slovenia, the States of Jersey (Crown Dependency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llinois.

Uniform legislation influenced by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has been prepared in Canada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adopted in 1999 by the Uniform Law Conference of Canada) (enacted by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Nova Scotia, Yukon, and as federal Canadian legislation.) and in the United States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dopted in 1999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Electronic Commerce Act -(Enacted in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Hawaii, Idaho,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West Virginia, Wyoming).

2. Legislation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has been adopted in Thailand.

3. UNCITRAL has six working groups. Each group is working on a separate project.

4. The most recent draft of the proposed convention is contained in:
A/CN.9/WG.IV/WP.100 February, 2003:

http://www.uncitral.org/english/workinggroups/wg_ec/wg4-wp-100-e.pdf.

A prior draft is contained in:

A/CN.9/WG.IV/WP.95, September 2001:

http://www.uncitral.org/english/workinggroups/wg_ec/wp-95e.pdf.

The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the proposed convention is also discussed in the reports of three meetings:

A/CN.9/509 Report of March 2002 meeting

<http://www.uncitral.org/english/sessions/unc/unc-35/509e.pdf>

A/CN.9/527 Report of October 2002 meeting (para 72 (126)

<http://www.uncitral.org/english/sessions/unc/unc-36/acn9-527-e.pdf>

A/CN.9/484 Report of March 2001 meeting (para 94 (127)

<http://www.uncitral.org/english/sessions/unc/unc-34/acn-484e.pdf>

two others this year.

The UETA was intended to be model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During the drafting process, the drafting committee incorporated much of the Model Law as well as some other American legislation, and, as well, was mindful of complimentary and possible contradictory provisions of the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C.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UNCITRAL Law Governing Electronic Commerce

Using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e Americ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nd the Canadian Electronic Commerce Act as examples of recent attempts to legislate electronic commerce, we can see a group of basic principles that emerge for what constitutes the basic attributes of a law governing electronic commerce and we can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se laws are harmonized.

i. The "functional-equivalent" approach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recognizes that legal requirements prescribing the use of traditional paper-based documentation constitute the mai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⁵ At the same time, it is recognized that enabling legislation should not necessitate the wholesale removal of the paper-based requirements themselves or disturb the legal concepts and approaches underlying those requirements.

To resolve these two concerns,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relies on a new approach,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which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the traditional paper-based requirement with a view to determine how those purposes or functions could be fulfilled through electronic-commerce. The concept is to singles out basic functions of paper-based form requirements, with a view to providing criteria, which, once they are met by non-paper records, have the same level of legal recognition as that of paper documents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This primarily relates to writings, signatures and originals, but not to other legal concepts.

1.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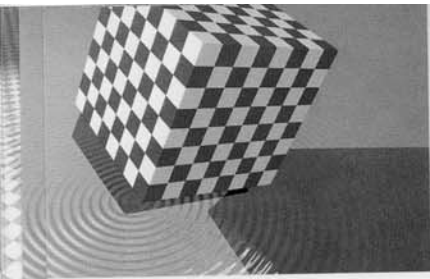
The major thrust of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s well as other statutory regimes governing e-commerce is to provide for an equivalent to traditional writings but that serve the same function that writing requirements have served.

Thus, for example,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provides that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it is accessible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This provision is applicable whether the requirement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information not being in writing.

The America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which was roughly modeled on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provides that a record, signature or contract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record. It also provides that if a law requires a record or signature to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if it is not, an electronic record satisfies that rule.

The Canadian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5. In the preparation of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possibility of dealing with impediment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posed by such requirements in national laws by way of an extension of the definition of such terms as "writing", "signature" and "original", with a view to encompass non-paper media. This approach is used for example in bo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art. 13) and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on Arbitration (art. 7)(writing includes (telex(or (telegraph)).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though, is that it is based on the then current technology.



likewise provides that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by reason that it is in electronic form. It also provides that a requirement for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is satisfied by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if the informatio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Thus, as with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merican Act, the Canadian legislation adopts a functional equivalence test.

The Australi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has also been draft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media neutrality and technology neutrality. As with the Model Act and the Canadian and American Acts, the aim of using media neutral and technology neutral terms is to focus on the purpose of the legal requirement, rather than the form by which that requirement is satisfied. As with all of the e-commerce acts, this should prevent the need for continuous amendments to deal with technological changes.

2. Signatures

A signature, be it in electronic or hand-written, fulfils a dual function. It both identifies the signatory and party to the contract and on the other hand it expresses the willingness to be bound by the contract. It may also serve a third function: a signature also testifies to the true content of the agreement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cept of a signature has never rigidly required in most contexts the actual handwriting of a person(s) name, and such things as a stamp, perforation or even a typewritten signature or a printed letterhead have been found to be sufficient to fulfil the signature requirement. However, in some contexts, there exist the requirements that combine the traditional hand

written signature with additional security procedur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the signature by witnesses or the function of notaries in certifying a signature.

It is within this framework that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other acts have attempted to replicate the functionality of signatures. An inherent problem of the dematerialized and intangible nature of electronic contracts was the inability to affix signatures to these agreements to fulfill the functions of a signature, and signature requirements currently present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Several initiatives have been taken to secure electronic commerce with some form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law. Legal initiatives include either electronic signature laws, or digital signatures⁶ or other public key-styled ((PKI) technologies.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that address both digital and electronic signatures.

It should be noted that attempts to develop rules on standards and procedures to be used as substitutes for specific instances of "signatures" have been unsuccessful as they have tied the legal frameworks to a given state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successful regimes have been technologically neutral.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provides that where the law requires a signature of a pers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a data message if:

-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and to indicate that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and
- (b) that method is as reliable as w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6. The digital signature is an attachment to a set of data which is composed by taking the output of a hash function, or digest, of the original data that is encrypted with the sender's private key. The hash function puts the original data through an algorithm, resulting in a data sequence unique to the particular message, but much shorter than the message itself. The digital signature can only be decrypted if the recipient has the correct public key. This allows the recipient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sender. The use of public key cryptography for digital signatures requires the assistance of a trusted third party - also known as a certifier, that establishes that the holders of public keys are who they purport to be. Certifiers thus identify public key holders and publish and update public keys, a process known as certificate issuance.

agreement.

This focuses on the two basic functions of a signature: to identify the author of a document and to confirm that the author approved the content of that document. This establishes the principle that,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e basic legal functions of a signature are performed by way of a method that identifies the originator of a data message and confirms that the originator approved the content of that data message. The method used should be as reliable as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data message i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of the data message.

The America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pproaches the ques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less from the less from the functional equivalent framework of the Model Act, and instead simply provides that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s wi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signature. But the act simply avoids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an electronic signature. This question is left to the unspecified technology and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in this technologically neutral definition, an electronic signature is attributable to a person if it was the created by the act of the person, and the effect of an electronic record or signature attributable to a person is determined from the contex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its creation, execution, or adoption.

ii. Medium Neutrality

Concomitant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is the principle of medium neutrality. Thus, to the extent that the functional equivalence is met by a data message, the fact that a particular medium, such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shall not deny the data message legal effect. Therefore, to the extent that the law otherwise requires a paper record, this requirement is removed. The principle of medium neutrality, which is essential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s recognized in the Model Act as well as the American and Canadian domestic law.

iii. Attribution

A brief mention of attribution should be made.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s well as other legal regimes such as the America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provide attribution rules that allow not only electronic data that is generated by humans to be attributed to the humans, but also electronic messages that are generated by electronic systems such as computers to be attributed to the person who programmed the system and set it in motion. Thus arguments that computers cannot have the intent to contract are deflected: the person who set up the computer can have the intent, and the intent can be recognized by that person using the computer as a tool.

iv.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s

Because a large part of what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other legal rules governing e-commerce are designed to handle is the actual formation of contracts, there is the question of how much substantive law governing contracts is necessary to fulfill this role. To a large extent, the question is not much. If the primary role of the legislation is to allow the substitution of electronic records for paper records, once that is achieved, most legal issues can be resolved by applying the underlying legal principles that otherwise govern the legal relationship.

However, because of the technical requirements of electronic systems, the question of time and place of the dispatch and receipt of messages is an area that it has been felt probably deserved substantive treatment in the enabling law. This is particularly true because parties are often conducting electronic transactions through transparent systems without any knowledge or concern about where the actual systems and servers are located.

This problem is resolved in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merican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for example, by the recognition that the location of information systems is irrelevant, and then and sets forth a more objective criterion based on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parties. This sensible rule deems the parties to be where they are not where their information systems are.

Before delving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s not intended to set up a conflicts of law rule, nor does it resolve the question of the underlying principle of contract formation regarding dispatch or receipt being the point of formation. This will vary by individual legal systems, and it is not overruled by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is is an extremely important principle for the functioning of e-commerce legislation in conjunction with other law, however, as is discussed below, it is a principle that does not have agreement at this time in the current work of UNCITRAL.

A. Time of Dispatch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a data message is (sent) when it is no longer within the control of the sender(s) information system. Thus, for example,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both provide that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originator and the addressee, the dispatch of a data message occurs when it enters an information system outside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erson who sent the data message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re is also general agreement that electronic commerce requires a specific standard to determine dispatch because the non-electronic law does not necessarily provide an answer based on existing rules.

There is an important aspects to this principle- what is required technologically to result in the data message being outside the sender(s) information system should not be defined in the law, but that it is a technological issue driven by facts and not law.

B. Time of Receipt

As with the sending of a data message, it is also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time a data message is received requires a specific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as the existing law does not provide adequate guidance. However, there is no agreement as to when that should be determined. Thus for example,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distinguishes betwee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information systems,⁷ whereas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requires the recipient to have designated a system.

C.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Under the UNIC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s well as the American, Canadian and Australian legislation, a data message is deemed to be dispatched at the place where the originator has its place of business, and is deemed to be received at the place where the addressee has its place of business.⁸ This simple rule avoids questions of where the electronic system is located, and this (or a similar) rule is deemed necessary because electronic commerce sets up the anomaly unknown in the world of paper based transactions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is physically located is often wholly irrelevant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jurisdiction based on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parties or the performance of the transaction.

7. If the addressee has designated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data messages, the time of receipt of a data message is determined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enters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If the data message is sent to an information system of the addressee that is not the designated information system, at the time when the data message is retrieved by the addressee.

8. Likewise, where the originator or the addressee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underlying transaction. Where there is no underlying transaction, the place of business is deemed to be where the party(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s. If the originator or the addressee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its habitual residence.

대구 화재는 풍수로 진압하자



김기선 | 아이교역 대표

요즘 대구사람들은 정말 외출하기가 겁난다고들 한다. 191명의 목숨을 앗아간 2.18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참사가 채 잊히기도 전에 이웃역인 지하철 반월당 공사장에서 5월 4일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95년 4월의 상인지하철 가스폭발사고뿐만 아니라 2000년 1월의 신남네거리 지하철 붕괴 참사도 있었다. 140년의 세계 지하철 역사에 100명 이상이 숨진 대형참사는 단 3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중앙로와 상인역 참사 2건이 대구에서 발생하였음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다.

왜 대구에만 이러한 대형참사가 겹치게 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선조들도 대구의 화재를 막기 위한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다. 「영남전설지」에 따르면, 비슬산에서 수도산, 연구산(連龜山)으로 이어지는 대구의 중심맥이 화산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잦아 당시 원님이 화재를 다스리기 위해 연구산 서쪽 기슭에 석빙고를 설치하고 물을 상징하는 자라모습의 바위를 정상에 안치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대구의 연구산에 있는 돌거북은 머리를 남쪽으로 물어 비슬산에 이어지는 지맥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물의 신인 돌거북으로 화마(火魔)를 진압하겠다는 비보풍수(裨補風水)의 처방이다. 그렇게 화재는 다스려지고 오늘날과 같은 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대구부읍지」에는 95개의 저수지와 87개의 보(洑)가 있었다 하나, 근대화의 물결과 도시개발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영선못·지산못·해자못·감삼못·월촌못을 비롯한 대구의 수많은 크고 작은 연못들은 메워지고 대신 학교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은 1인당 시멘트 소비가 세계 평균의 4배가 되는 콘크리트 공화국이 돼버렸다.

풍수적으로 보면, 비슬산의 화기(火氣)에다 수많은 아파트단지 조성, 주거환경개선이란 미명 하에 지어지는 시멘트 건축물들이 화기를 더욱 높이고 수년 간 계속되고 있는 지하철 공사는 곳곳에 땅을 파헤치고 있으니 땅속의 화기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구는 높은 산(陽)들이 둘러싼 분지라 단층 가옥이나 낮은 건물(陰)을 지어야 모든 일이 순조로

운데 고층 시멘트 건물(陽)들이 즐비하니 양(陽)끼리 충돌하여 화(火)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른다. 대구는 지금 도시 난개발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들 모두 깊이 깨달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이같은 대형참사를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돌거북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일여자중학교 교정에 가면 오늘도 짝을 잃은 한 마리의 돌거북은 언제부터인가 화마를 진압하기 위한 남향의 책임을 망각한 채, 외롭게 그러나 한가하게, 동향을 하고 있다. 동쪽은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을 뜻하는 거북이 동향하고 있음은 수생목(水生木)으로 대구에 나무를 잘 키우고 다시 목생화(木生火)로 화기(火氣)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무등산의 화기가 강하여 일제 말 시대에 화재가 자주 일어났으며 계림동에 경양방죽을 만들어 화기를 막았다는데 1967년 태풍을 없애는 흙으로 경양방죽을 매립하였기 때문에 '80년 5월의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되었으며 근래까지 화재가 잦다고들 한다.

해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해인사에서는 매화산으로 알려진 남산제일봉에 올라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고 법당축대와 해인사 곳곳에 소금물을 붓는 행사를 함으로써 화재를 막아 대장경을 보호하고 있다. 창건 후 일곱 차례의 대형화재로 해인사가 거의 폐사될 위기에 처했을 때 19세기 초 경상감사를 지낸 김노경이 이같은 풍수처방을 하여 오늘날까지 거의 200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앙박물관 앞에 세웠던 해태상, 창원 성주사 대웅전입구의 돼지석상 등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조성된 풍수 비보물(裨補物)들은 지금도 화기를 제압하는 역할을 성실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들의 옛 선조들은 풍수의 지식을 필수교양으로 알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생활화하였으며 오늘날 서양에서도 풍수를 동양의 지혜로 알고 았다뒹 받아들여 환경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를 괴롭히는 화마를 진압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들도 비보풍수에서 그 처방을 구하자. 물을 상징하는 돌거북·석빙고·돼지석상·해태상 배치, 소금단지 매립, 연못 조성, 분수대 설치 등으로 대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서구적인 사고틀에서 벗어나 우리 선조들의 보이지 않는 지혜를 배워 대구시민들의 자신감을 회복하자.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



제159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7월 25일(금) 18:00~20:00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U대회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제159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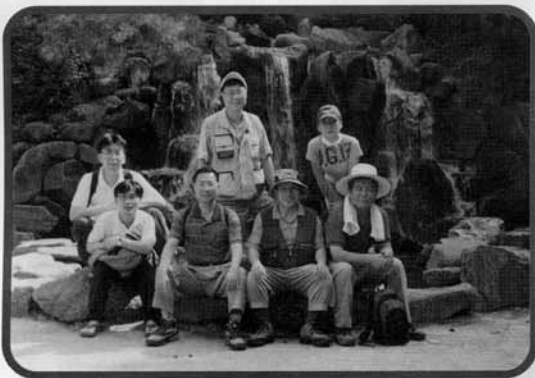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하 2003년 대구하계U대회 집행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별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4일(월) 17:00~19:30까지 대구 미 문화원 아트홀에서 「Harmoniz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Trade Laws」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Henry D. Gabriel 미국 Loyola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34차 이토회 개최

지난 8월 9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4차 이토회를 가졌다.



회원동정



■ 강창호

강창호 포스코 사장은 8월 19일 중국 셴양에서 라오닝성 소재 번시강철 장잉푸 사장과 본강포항병연 유한공사 합작설립 관련 계약을 체결



■ 권찬태

권찬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년 동안 Brigham Young University로의 공무해외출장을 위해 8월 6일 출국



■ 김상우

김상우 한국관광학회(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8월 18일~20일까지 제주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동북아 관광허브 전략」을 주제로 제54차 국제관광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개최



■ 김석진

김석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8월 5일 전국교수단체연대 대표자들과 교육부총리와의 간담회에 참석
• 12일 한국금융학회 주최의 학술보고대회 「우리나라 은행의 역할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참여(집필자 중 1인)

- 한국증권학회의 증권학회지 제32권 1호(2003. 6)에 「매각목적과 분리매각의 성과」라는 논문 발간
-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재무관리연구 제20권 1호(2003. 6)에 「분리공모를 통한 구조조정 의 성과 : 추가분석」이라는 논문 발간



■ 김용준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인터넷비즈니스과 교수는 6월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직업훈련기관 및 내용 평가위원」에 위촉

•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에 국비지원을 받아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을 실시(총 40시간, 30명)



■ 김원경

김원경 경동정보대학장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학 간호과, 체형피부관리과 등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건강체크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



■ 남성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장은 7월 30일 대구보건대 영송관에서 경북대병원(원장 전수한)과 지역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짐



■ 변종국

변종국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영남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임명됨



■ 신호균

신호균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6월 25일 서울 농수산 AT센터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과제의 패널 심사위원으로 참석
•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7/3-6)에서 Ustoz재단 초청으로 개최한 국제학회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성공요인」과 「모바일 산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터키 이스탄불(7/7-10)에서 개최한 EURO-INFORMS 국제학회에서는 「e-비즈니스 산업의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

• 8월 11일 경북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 국제로타리 3630 지구 RYLA 프로그램의 「디지털시대의 우리의 미래상」이란 제목으로 특강

• 13일 금오공대 세미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수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

• 13일 금오공대 세미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수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



■ 안희관

안희관 계명문화대학 기획실장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필리핀대와 라살대 등 3개 대학과의 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8월 20일 출국, 23일 귀국



■ 이진무

이진무 Kaist 금융공학센터 연구위원(前 대구시 부시장)은 7월 31일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부촌장으로 선임됨



■ 이해봉

이해봉 한나리당 대구시지부장은 8월 13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리는 「한·몽골 불교 교류법회」에 참석



회원동정



■ 이 훈

이 훈 (주)e-SIS 대표이사는 (주)일지테크(진량/자동차부품)를 SCM 협업솔루션부문 새고객으로 맞이함(Zionex의 T3Plan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Supply Chain Management 솔루션으로 기업내, 외부시스템과 연계하는 협업솔루션임)

•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수행업체로서,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권 참여업체들의 3차원 통합카탈로그 제작을 담당, 상반기의 뛰어난 수행실적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갈 전망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7월 31일 ~ 8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World Best지도위원 워크샵에 참석

•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이버 교육강좌 촬영(창업부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2003년도 여성기업 컨설팅지원사」 컨설팅사로 선정



■ 최달곤

최달곤 영진전문대학장은 7월 29일 부산 동의공업대(학장 이충업)와 양 대학 상호간 교수, 학생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짐



■ 최성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8월 9일 동양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제공인 IT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모교방문 수련회」에 참석, 졸업생과 재학생이 서로 확고한 휴먼네트워크를 다져 줄 것을 당부

• 8월 22일 전통관례와 다도·선비 서식예절 등 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인성교육관 기공식을 가짐



■ 황대현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대구·경북사랑의 집짓기운동 명예이사)은 7월 7일 푸른방송사 지하 홀에서 간부공무원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방송인 푸른방송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

자치 TV화상회의에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및 답변

• 10일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소재의 사랑의 집짓기 기공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함께하고 관계자를 격려

• 8월 11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룡) 주관의 「지방화시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란 정책간담회에 참석



■ 신일희(본원 고문)

신일희 본원 고문(계명대학교 총장)은 7월 31일 2003대구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총장으로 선임됨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8월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방문해 하계 입영훈련중인 영남대 재학생 학군사관후보생 107명을 찾아 격려



■ 최용호(본원 명예원장)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7월 10일 대구광역시의 중소기업자대회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

•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

• 21일 3공단내 조명기구 생산업체인 경일산업과 안경테 제조업체인 Group 2020 방문

• 25일 중소기업청의 "향토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참석



■ 김지수(본원 부원장)

김지수 본원 부원장(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8월 19일 한국산업경영학회 2003년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우리나라 과잉투자 제조기업의 특성과 과잉투자 요인에 관한 연구」로 학술상 수상

지난 7월호 회원동정에 게재된 김영재 동국대학교 상경대학장의 「해의 교류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해 18일 미주 지역의 영남대 동창회와 자매대학을 방문, 25일 귀국」은 잘못된 동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 정재엽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모친상 : 2003년 8월 5일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산업자원부, "2003 테크노포럼21 기술인력 포럼 - 대학에서 바라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 2003. 7. 8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2003. 7. 16
-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 변혁기와 국내기업의 약진", 2003. 7. 23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기업의 최근 동향과 부침요인", 2003. 7. 30
- 삼일회계법인, "기업관리법", 2003. 6. 15
- 세계경제연구원, "亞·太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2003. 7
- 한국금융연구원, "Private Banking", 2003. 7. 23
- 한국금융연구원, "2003年度 下半年 經濟展望", 2003. 7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별편람", 2003. 6. 30

정기간행물

-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2003. 7
-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3. 7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3. 7/8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8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3. 7·8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3. 7
- 대구은행, "대은경제리뷰", 2003. 5·6
-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3. 8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2003. 7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8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3. 7
-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의 햇불", 2003. 6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7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8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8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8
-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3. 8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8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8
- 한국수출입은행, "수는 해외경제", 2003. 8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6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7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003. 5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003. 6
- 한국은행, "2003 경제통계연보", 2003. 6
-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식문화저널", 2003. 7·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2003. 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Brief", 2003. 7(제30호)
- (주)푸드웰, "가실", 2003. 7·8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시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8월호 (통권 148호)

- 간 별 : 월간
- 등록 번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3년 8월 30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 총장)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 · 편집 : (주)멀티애드메이저(053-751-5005)




URI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영남법무법인이 도와 드립니다.

소송 수행

권리를 찾는 지름길, 영남법무법인이 찾아드립니다.

- 소송 수행 각종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노무관련사건
- 보험관련 소송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권익보호의 첫 걸음, 영남법무법인과 상의하십시오.

- 지적재산권 관련업무(특허 업무 등)
국내 및 국제특허와 관련한 출원 및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국내 및 국제 의장, 상표와 관련한 출원 및 등록까지의 제반업무
국내외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심판, 소송, 감정서 작성 등의 제반업무
출원 공개 및 등록된 각종 산업재산권의 선행기술조사 및 선행상표 검색업무
- 저작권관련 상담 자문
- 라이선스 계약 상담

공증 · 계약

재판없이 권리행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 공증 업무 유언 공증, 어음 공증, 집행증서 작성, 양도 공증, 각종 인증, 확정일자 부여 등 공증에 관련된 각종 업무
- 계약관련 업무 계약서 검토, 작성, 상담

【변호사】

- 여동영 (752-0201, 범어빌딩 202호)
- 금병태 (756-4001, 범어빌딩 206호)
- 최종혁 (756-4001, 범어빌딩 206호)
- 백수일 (742-5300, 범어빌딩 504호)
- 이동형 (756-4001, 범어빌딩 206호)



嶺南법무법인 / 국제특허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6호
www.allround.co.kr
TEL : 053-756-4001(송무), 053-753-4411(특허)
FAX : 053-751-7374(송무), 053-753-4415(특허)

